

의 안 검 토 보 고

1. 발의또는 제출자 : 대전광역시장
2. 건 명 :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
3. 안건요지 : 별 첨

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.

1995. 2.

내 무 위 원 회

전문위원 정 진



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995. 2.

내무위원회 전문위원

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검 토 보 고

본 안건은 1995. 1. 14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. 1. 20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1. 제 안 이 유

지난해 3. 16 “지방자치법 제103조(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)”가 개정되고, 그 후속으로 대통령령인 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

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”이 '95. 1. 1자로 제정, 시행됨에 따라 종전규칙으로 규정하던 지방공무원정원을 정원관리기관별로 정원의 총수를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임.

2. 주 요 골 자

가. 시본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시본청 804명, 직속기관 703명, 사업소 1,080명으로 규정함. (안 제2조)

나. 시본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함. (안 제2조)

3. 검 토 의 견

본 안건은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103조가 94. 3. 16개정되고, 이에 따른 시행령으로 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

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” 이 95. 1. 1 제정 시행됨에 따라 종전 규칙으로 규정하던 지방공무원 정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원관리 기관별로 정원의 총수만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내용임.

주요내용으로는

첫째, 시본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94년말 정수를 기준으로 하여 시본청은 804명, 공무원교육원, 보건환경연구원, 농촌지도소의 직속기관은 703명, 그리고 상수도본부와 종합건설본부 등 18개 사업소는 1,080명으로 하였음.

둘째, 시본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음.

이상의 기관별 정수기준이나 직급별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하여 그 범위내에서 총수만 정한것이라 하겠음.

그러나 본 안건 역시 행정기구의 설치조례안과 같이 대통령령에서 정한기준에 따라 총정원만 조례화 한 것으로, 현행 법령의 위임범위로 볼때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다만, 금번 정원관리규정의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자율적인 정원조정은 불가하고, 동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직급

별 정원과 책정문제가 내무부령에 의한 기준을 따르고 또한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는 자치특색에 맞는 정원관리의 자율권

이 좀더 확대되어야 하겠고, 최소단위로 실·국별 정원까지는 조례로 관리되도록 관계법령이나 제도적 보완장치가 뒤따라야 한다고봄.